

넥서스 브리프

NB-2026-046 · 감독·제도 · 발행 2026.08.18 · 읽기 6 분

손해배상·과징금·형벌을 3 년간 면제하겠다는 공시는 무엇인가

면제의 범위는 발표됐고 면제의 요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이번 방안의 중심이 공시 대상 확대가 아니라 책임 면제에 있다고 본다. 사업보고서 기재의 신뢰성은 자본시장법 제 162 조의 손해배상책임과 제 429 조의 과징금, 제 444 조의 형벌에서 나온다. 방안대로 그 셋을 3 년간 면제하면, 그 기간의 지속가능성 기재는 같은 서류의 다른 기재와 성격이 달라진다.

01 · 확정된 사실

금융위원회는 2026 년 7 월 8 일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을 발표했다.

항목	값	비고
의무화 시작	2028 년(FY27) 공시분부터	금융위원회 2026.7.8 방안
최초 적용 대상	연결자산총액 10 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대상 확대	2029 년 5 조원 · 2030 년 2 조원 이상	
책임 면제 방침	공시 초기 3 년간 전면 면제(방안)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처벌, 고의적 그린워싱 제외
제 3 자 인증	의무화 2 년 후인 2030 년부터 단계 도입	
Scope3 공시	공시대상별 3 년 유예	

공시가 실리는 곳은 사업보고서다. 지속가능성 정보를 별도 서류가 아니라 사업보고서 안에 담도록 했다. 사업보고서는 자본시장법 제 159 조에 따라 상장법인 등이 사업연도 경과 후 90 일 이내에 제출하는 서류다. 기재사항은 같은 조 제 2 항 각 호가 정하고, 제 5 호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시행령 제 168 조 제 3 항이 그 내용을 정한다.

면제 대상은 셋이다. 발표문의 문구는 「공시 초기 3 년간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전면 면제하되…」다. 뒤에 「고의적 그린워싱에는 책임을 엄중히 물음」이 붙었다. 면제 3 년의 기산점은 이 자료에 없다. 삼일 PwC 자료는 예측·추정정보 등을 합리적이고 충실하게 공시한 경우에 면책이 적용된다고 전한다.

인증과 범위에도 유예가 붙었다. 제 3 자 인증은 공시 의무화 2 년 후인 2030 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공급망 배출량인 Scope3 공시는 공시대상별로 3 년 유예한다. 금융위원회는 실무지원과 컨설팅, 산정 인프라 구축, ESG 정보의 공적 활용 확대 등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는 금융위원회가 7 월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보도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사업보고서에 적힌 내용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적은 자가 틀렸을 때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제 162 조 제 1 항은 사업보고서 등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나 기재 누락을 다룬다. 그로 인해 증권을 취득·처분한 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한다. 배상책임자는 제출인과 제출 당시의 이사,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신용평가전문가 등 네 개 호다. 상당한 주의를 했어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취득·처분자가 이미 그 사실을 알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된다.

행정제재는 과징금 하나가 아니다. 제 429 조 제 3 항은 사업보고서 등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기재 누락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상한은 직전 사업연도 주식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 분의 10 이고, 최대 20 억원이다. 같은 조 제 6 항은 위반이 있을 때부터 5 년이 지나면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제 164 조 제 2 항은 정정명령과 증권 발행·거래의 정지를 정한다. 형벌은 제 444 조 제 13 호 라목이고 법정형은 5 년 이하 징역 또는 2 억원 이하 벌금이다.

이 셋을 3 년간 적용하지 않으면, 그 기간의 지속가능성 기재에는 사후에 틀림을 확인하고 되돌리는 절차가 남지 않는다. 제 3 자 인증도 2030 년부터다. 작성자가 스스로 적고, 외부가 확인하지 않으며, 틀려도 배상·과징금·형벌이 없는 기재가 재무 기재와 같은 서류에 실린다.

기업이 부담하는 산정 비용은 남는다. 배출량과 기후위험 산정은 방법에 따라 값이 달라지고, 자료를 모으는 데 비용이 든다. 틀렸을 때 지는 것이 없으면, 보수적으로 산정할 이유도 산정 방법을 상세히 밝힐 이유도 줄어든다. 제 162 조는 사업보고서 기재가 사실과 달랐을 때 투자자가 손해를 회복하는 근거 조문이다.

발표문이 밝힌 것은 면제의 범위까지다. 면제의 요건, 고의적 그린워싱과 산정 오류를 가르는 기준, 면제 기간이 지난 뒤 그 3 년치 기재를 다루는 방법은 이 자료에 없다. 연구소는 면제의 범위보다 면제의 요건이 개정안 조문에 어떻게 적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본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이 기재를 읽고 판단하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식을 사거나 파는 개인이다. 2028 년 대상은 연결자산총액 10 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다. 파이낸셜뉴스는 그 수를 107 개사로, 2029 년 157 개사, 2030 년 259 개사로 전했다. 기준 금액이 5 분의 1 이 되므로 대상 회사 수는 늘어난다. 펀드나 퇴직연금으로 이 회사들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도 같은 기재의 영향을 받는다.

차이는 손해가 났을 때 드러난다. 어떤 사람이 사업보고서를 읽고 1,000 만원어치를 샀다고 하자. 재무 기재가 사실과 달랐다면 제 162 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액은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취득가격과 변론종결 시 시장가격의 차액으로 추정한다. 제 4 항은 그 차액이 거짓 기재와 무관함이 증명되면 그만큼 감액하도록 한다. 면제 기간의 지속가능성 기재는 발표문대로라면 이 조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발표문은 사업보고서에 면제 여부를 표시하는지 밝히지 않았다. 재무 기재와 지속가능성 기재는 같은 서류에 함께 실린다. 어느 쪽이 배상과 과징금의 대상인지는 자본시장법 조문과 개정안을 함께 읽어야 갈린다.

04 · 무엇이 안 막히는가

- 면제의 요건이 조문에 어떻게 적힐지 정해지지 않았다. 발표문은 전면 면제로 적었으나, 별도 정리자료는 합리적이고 충실하게 공시한 경우로 조건을 전한다. 둘은 범위가 다르다.

- 고의적 그린워싱과 산정 오류를 가르는 기준이 없다. 발표문은 고의적 그린워싱에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고만 적었고, 누가 어느 단계에서 고의를 판단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 면제 3 년의 기산점이 제도 시행일인지 기업별 최초 공시연도인지 이 자료에 없다. 2030 년에 처음 공시하는 2 조원 이상 기업의 면제가 언제 끝나는지도 같은 이유로 확인되지 않는다.
- 면제 기간이 끝난 뒤 그 3 년치 기재를 어떻게 다루는지 정해지지 않았다. 소급해 다루지 못하게 하는지, 제 429 조 제 6 항의 5 년 제척기간을 그대로 두는지는 발표문에 없다.

05 · 지금 할 일

국민

- 지속가능성 정보를 근거로 판단할 때는 그 정보가 사업보고서에 실린 것인지 별도 보고서에 실린 것인지 먼저 가른다.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회사명을 검색하면 제출 서류의 종류가 나온다.
- 펀드나 퇴직연금이 ESG 를 기준으로 운용된다고 안내받았으면, 그 기준이 어느 자료에 근거하는지 판매사에 서면 회신을 요청한다.

금융회사

- 면제 기간에도 산정 방법과 가정, 자료 출처를 기재에 함께 적는 관행이 필요하다. 면제되는 것은 책임이지 기재의 근거가 아니다.
- 지속가능성 기재와 재무 기재를 같은 서류에 실을 때 제 3 자 인증을 받지 않은 부분을 서류 안에 표시한다.

당국

- 면제의 요건과 범위를 개정안 조문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면제되는 기재와 면제되지 않는 기재를 사업보고서 서식에서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 고의적 그린워싱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면제 시행 전에 공개하면 면제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갈림길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 면제의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다. 발표문은 전면 면제라고 적었고, 별도 정리자료는 예측·추정정보를 합리적이고 충실하게 공시한 경우를 조건으로 전한다.

A 로 가면 · 조건 없이 기간만 정해 면제하면, 국민은 그 3 년치 지속가능성 기재 전부를 배상 청구가 되지 않는 기재로 보고 읽어야 한다.

B 로 가면 · 합리적·충실 공시를 조건으로 달면 면제 여부가 사안마다 갈린다. 국민은 어느 기재가 조건을 갖췄는지 분쟁이 생긴 뒤에야 알게 된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부칙과 특례 조문에 면제의 조건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한다. 조건이 고의 하나인지, 합리적이고 충실한 공시까지인지를 본다.

함께 읽을 것

란	편
금융제도	기업공시제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제재의 종류와 효력
금융사건	5 조 7000 억원을 숨긴 재무제표로 회사채가 팔렸다 장부가 2,900 억이 4 조 8,000 억이 됐다

란	편
	상장 직전 분기 매출 5,900 만원, 공모가는 3 만 1,000 원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등급	출처
2028 년(FY27)부터 연결자산총액 10 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사업보고서 내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2029 년 5 조원·2030 년 2 조원 이상으로 순차 확대	1 차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 (2026.7.8) KDI 전재본. 원문 문구 — "'28 년(FY27)부터 연결자산총액 10 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사업보고서 내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의무화하며, '29 년에는 5 조원, '30 년에는 2 조원 이상으로 대상을 순차 확대함." 금융위 원문 (www.fsc.go.kr/no010101/87280)은 robots 차단으로 열지 못했고, 첨부 D26070050.pdf(21p)도 열지 못했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3927
공시 초기 3 년간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처벌 전면 면제, 고의적 그린워싱은 제외. 아직 방안 단계이고 법령에 반영되지 않았다	1 차	같은 발표문 원문 문구 — "공시 초기 3 년간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전면 면제하되, 고의적 그린워싱에는 책임을 엄중히 물음." 면제의 법 형식·기산점·고의 판단 기준·고의 외의 요건은 이 자료에 없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3927
제 3 자 인증은 공시 의무화 2 년 후인 2030 년부터 단계 도입, Scope3 공시는 공시대상별 3 년 유예	1 차	같은 발표문 원문 문구 — "제 3 자 인증은 공시 의무화 2 년 후인 '30 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Scope3(공급망 배출량) 공시는 공시대상별 3 년 유예함." 지원체계 항목은 "기업 실무지원 및 컨설팅 ... 등"으로 열거를 달지 않았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3927
자본시장법 제 159 조 — 주권상장법인 등은 사업연도 경과 후 90 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 기재사항은 제 2 항 각 호가 정하고 제 5 호가 대통령령에 위임	1 차	한국법제연구원 현행 영문본 Article 159 (Submission of business report). 판본 Act No. 21134(2025.11.11). 원문 문구 — "within 90 days of the closing of each business year", 제 2 항 제 5 호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항별 개정표시 (1) Feb. 29, 2008 / (2) May 28, 2013; Mar. 29, 2016.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72361&cseq=2238316
자본시장법 제 162 조 제 1 항 — 사업보고서 등의 중요사항 거짓기재·기재누락으로 증권을 취득·처분한 자의 손해를 배상. 배상책임자는 네 개 호. 면책은 상당한 주의를 했어도 알 수 없었음 또는 취득·처분자의 악의 두 갈래. 제 3 항은 배상액을 취득가격과 변론종결 시 시장가격의 차액으로 추정하고, 제 4 항은 인과관계 없는 부분의 감액을 정함	1 차	한국법제연구원 현행 영문본 Article 162. 판본 Act No. 21134(2025.11.11), 조문 개정표시 "Amended on Feb. 3, 2009; Jan. 21, 2025". 원문 문구 — "who acquired or disposed of a security ... due to a false statement or 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면책 "unable to know such fact although he or she exercised reasonable care" 또는 "the person who acquired or disposed of such security knew the fact", 제 3 항 "estimated by calculating the difference". 신뢰(거래인과관계) 요건은 조문에 없다.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72361&cseq=2238320

확인한 사실·숫자	등급	출처
자본시장법 제 429 조 제 3 항 — 사업보고서 등 중요사항 거짓기재·기재누락에 직전 사업연도 주식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상한은 20 억원. 제 6 항 — 위반이 있는 때부터 5 년이 지나면 부과 불가	1 차	한국법제연구원 현행 영문본 Article 429. 판본 Act No. 21134(2025.11.11), 조문 개정표시 "Amended on Feb. 29, 2008; Jan. 21, 2025". 원문 문구 — "may impose ... a penalty surcharge not exceeding 10 percent (... 2 billion won if the amount exceeds 2 billion won or if the stocks ... have not been traded ...) of the daily average trading amount"(괄호 안 하한 금액 표현은 영문본 문장이 어긋나 있어 본문에 쓰지 않았다). 제 6 항 "No penalty surcharge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5) shall be imposed upon the lapse of the 5-year period ..." \<Added on May 28, 2013; Jan. 23, 2024\>. 2024.1.23 개정으로 제 5 항에서 제 6 항으로 이동했고, 제 5 항은 제 173 조의 3 보고의무 위반 과징금이다.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72361&cseq=2238752
자본시장법 제 444 조 제 13 호 라목 — 제 159 조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기재누락에 5 년 이하 징역 또는 2 억원 이하 벌금	1 차	한국법제연구원 현행 영문본 Article 444 (Penalty provisions). 판본 Act No. 21134(2025.11.11), 개정표시에 Jan. 21, 2025; Sep. 16, 2025 포함. 법정형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5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0 million won". 제 13 호 각 목 중 "(d) A business report under Article 159"가 사업보고서다.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72361&cseq=2238775
자본시장법 제 164 조 제 2 항 —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등에 관하여 정정명령, 증권 발행·거래의 정지·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	한국법제연구원 현행 영문본 Article 164 (Inspection and measures). 판본 Act No. 21134(2025.11.11). 원문 문구 — "disclose relevant facts to the public", "make a correction", "suspend or prohibit issuance of securities or any other transaction", "take any of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행정제재는 과징금 하나로 달하지 않는다.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72361&cseq=223832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68 조 제 3 항이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을 정하고, 마지막 제 9 호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다	1 차	한국법제연구원 현행 영문본 시행령 Article 168 (Matters to be contained in business reports and accompanying documents). 판본 대통령령 No. 35994(2025.12.30). 제 3 항 제 9 호 "Other matter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72622&cseq=2274585
면책(세이프하버)의 조건으로 예측·추정정보 및 통제할 수 없는 제 3 자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합리적이고 충실하게 공시한 경우가 제시되고, 초기 3 년간 적용된다	2 차	삼일 PwC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확정」 정리자료. 인용 문구 — "기업이 예측·추정정보 및 통제할 수 없는 제 3 자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합리적이고 충실하게 공시한 경우 Safe Harbor(면책)가 적용", "초기 3 년간 면책 적용". KDI 전제본의 "전면 면제"보다 조건이 붙어 있어 2 차로 표시한다. https://www.pwc.com/kr/ko/services/sustainability-platform/insights/sustainability-disclosure-roadmap.html
금융위원회가 7 월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보도. 대상 회사 수는 2028 년 107 개사, 2029 년 157 개사, 2030 년 259 개사	2 차	파이낸셜뉴스 「연결자산 10 조 이상 상장사, 2028 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 (2026.7.8). 인용 문구 — "금융위는 이달 중 최종안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제화 절차를 밟을 계획", "연결자산총액 10 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 107 개사". 2030 년 2 조원 이상 259 개사는 같은 보도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로 적혔다. https://www.fnnews.com/news/202607081822040947
의무 대상 기준 금액이 2028 년 10 조원에서 2030 년 2 조원으로 5 분의 1 이 된다	파생	계산식 — 2 조원 ÷ 10 조원 = 1/5. 발표문의 연도별 기준 금액에서 산출.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3927

본문 분량	검증 항목	1 차 자료	추적 예정
2,470 자	12 건	9 건 (75%)	6 개월 뒤

추적할 때 볼 것 ·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의결되었는지, 그 조문에 면제의 요건과 기산점, 고의적 그린워싱의 판단 기준이 적혔는지 확인한다.

정정 없음

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과 견해이며, 어떤 감독기관이나 금융회사의 공식 입장도 아닙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가입·해지를 권유하지 않으며,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실관계와 수치는 발행일 기준이며, 근거는 위 검증표에 밝힌 자료에 한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